

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, 이자지출이 국방예산에 육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8.28. 문화일보는 「세수 믿고 빚늘리는 정부 … 이자만 국방예산 육박 전망」 기사에서,
 - “금리 인상기가 본격화하면서 국채이자 비용만 1년 국방예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‘2025~2029 국가재정운용계획’ 상 이자지출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 중반 수준으로, 국방예산(’26년 본예산 기준 65.9조원)에 육박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 - 또한,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1%대로 주요국 대비 높지 않고, ’22년에서 ’27년까지의 증가폭 전망*도 낮아서 충분한 감당 능력이 있는 상황입니다.

* (OECD Economic Outlook) 한국(0.39%p), 프랑스(0.76%p), 일본(0.91%p), 미국(1.28%p) 등

-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지출증가율 관리, GDP 성장 등을 통해 중기적 시계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.

- 우리나라 부채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*으로, IMF 등 국제기구**도 한국의 재정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,

* 선진국 그룹별 일반정부 부채(D2) 수준('26전망, GDP%, IMF 기준):

[한국]54.4 vs [IMF 선진국]108.2 [유로]87.8 [G7]123.7 [G20]118.9

** (IMF 연례협의, '25.11) "중앙정부 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다"

-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한 필요성*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* (OECD '26.7) "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", "GDP의 약 1%에 해당하는 두 차례 추경이 2년간의 부진했던 소비에 이어 25년 3분기부터 가계 지출을 끌어올렸다" (IMF, '26.5) "26년 예산안의 재정기조는 적절하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"

- 정부는 구조적 전환기에서 담대한 재정투자로 경제-재정 선순환을 구현하여,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,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,

- 조만간 발표될 '27년 예산안에서는 '26년 대비 '27년 관리재정수지, 국가 채무비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원 (jaewonlee@korea.kr)